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예산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
법인세 과세 구간별 1%p씩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 감액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전격 타결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됐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합의하지 못 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며 시행까지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 원으로 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당대표 선거인데…화두는 '윤심'

당권 주자들 견제·비판·호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레이스에 가속이 붙으면서 예상대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당원투표 100%'로 치르는 당 대표 선거 룰 개정이 굳어진 상황에서 윤심을 얻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레이스 초반 친윤(친윤석열)계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윤심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22일 당권 주자 중에선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당원 연수에 참석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또 다른 윤핵관 4인방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과 부쩍 가깝게 지내면서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오전 SBS 라디오에서 장 의원에 대해 "정무적 감각은 굉장히 빠르고, 판단에 있어서 거의 실수가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크게 활용되지 않겠나"라고 치켜세웠다.

'김장연대'가 주목받자 다른 주자들은 견제구를 던졌다.

범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팀으로 가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 발언으로 당이 분열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나. 윤심이 결코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약한 분들은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은 더 공격적으로 윤심 차단에 주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과 공천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징역 2년 형을 사셨다. 그 수사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과학 인재 만난 윤 대통령 "여러분 중 노벨상 수상자 나올 것"

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을 1시간 동안 만났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벨상이 나올 때가 됐다. 한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라며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월드컵 국가대표팀,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관련 행사를 소화하며 연일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학인재 지원 계획도 언급하며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학생들과 다양한 관심사를 놓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이상민 행안장관 상대 심판 청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연합뉴스